

# 바람직한 유보통합 방향 모색

### 전북자치도, 어린이집 정책 세미나... 영유아 평등한 교육 등 위한 체계 구축 방안 논의

“유보통합은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이 마련됐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임승식 전북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보육전문가,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유보통합 방향 모색을 위한 어린이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공정한 유보통합, 균등한 재정부’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보육전문가,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유보통합 방향 모색을 위한 어린이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해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1997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보통합의 방향성,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그리고 정책적 도전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의 좌장은 국주영은 도의회의원이 맡았으며, 김태연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가 ‘바람직한 유보통합 방향’이라는 내용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오현숙 도의원, 모용희 근로복지공단 정읍어린이집 원장, 김수연 군산 다솜사랑어린이집 원장, 유효영 어린이집 교사, 김가에 어린이집 학부모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유보통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영유아 중심의 구체적 정책 방안 마련 △교사 자격 통합과 전문성 확보 △보육교사의 현실적인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 건국장은 “유보통합 실현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은 앞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독일 작센주와 교류 의향서 체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전북 대표단은 4일(현지시간) 독일 작센주 주총리실에서 미하엘 크레취머 작센 주총리를 만나 수소, 탄소, 문화,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 의향서 체결식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 “尹정부 상병수당 국정과제 사실상 포기”

### 민주 박희승 의원, ‘내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분석 결과 “시범사업 부실 집행으로 ‘미흡’... 국민 앞에 약속한 상병수당 공약 지켜야”

윤석열 정부에서 본사업 시기를 이미 2년 연기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정수 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6억 1,4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46억 500만 원 대비 75.3%가 줄어든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61억 4,500만 원의 58.8%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집행한 결과다.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실 집행을 기준 2022년 27.1%, 지난해 32.4%에 그쳤으며, 올해도 7월 기준 30.4%로 부진하다. 또 지난해 예산상 목표 인원 27,034명 중 6,850건을 지원해 목표 대비 실적도 저조하다.  
그 결과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 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아 지출 구조 조정 대상 사업이 됐다. 지출 구

비 실적도 저조하다.  
그 결과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 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아 지출 구조 조정 대상 사업이 됐다. 지출 구

조조정 계획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 요구 계획조차 61억4,500만원에 불과했지만, 이마저도 재정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 액수가 재차 감액된 것이다.

박희승 의원이 앞서 8월 20일 결산 심사에서 이를 지적하자 조규홍 장관은 “2년 동안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충실히 다져가지고, 27년에는 본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성과를 보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희승 의원은 “이렇게 토막 난 예산으로는 한국에 맞는 최적의 모형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분석·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성과를 보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상병수당 모델을 찾겠다는 의지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희승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상병수당 공약을 지켜야 한다.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상병수당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파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 선정 환영

### 민주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은 5일, 익산시가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 조성 사업으로서, 행정부가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 80곳과 관심 지역 18곳 대상 공모를 진행하여 익산시 포함 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특별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 확보한 익산시는 총사업비 222억원을 투입해



‘더로운-모아(母兒)복합센터’를 건립한다. 시는 난임부부 클리닉과 아픈 아이 돌봄센터 등 시설을 마련하여 결혼부터 보육까지 필요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은 “출산·보육 인프라 구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뜻깊다”라며, “모아복합센터가 지방소멸 극복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송기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공 캠핑장’ 설립을 제안했고, 최재기 의원은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으며, 이상길 의원은 ‘초고압 송전설비, 정읍시민의 생명 담보할 수 없다’를 역설했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황해숙·이만재·오명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해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기·이만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지원 순환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재) 소관으로 황해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형·박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택보존에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가결한 뒤 임시회를 끝마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 도내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증진

###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원,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국주영은 의원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점자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가 제한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점자 자료 확대 보급과 문화 확산을 통해 도내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적 소외 없이 동등하게 살아가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국주영은 의원은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점자 문서 보급 및 비용 지원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관련 사항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및 기념행사 관련 사항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및 포상 규정 △점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

또한, 조례는 도시사의 책무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6월 기준 전북자치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2만9,753명으로, 이중 8.3%인 1만7,499명이 시각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주영은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외부와 소통하는 필수적인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이 신장되고, 점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며 포용적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0일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만호 기자

## 도의회 기획행정위

###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도시재생·균형발전·이민정책·지방자치·지방행정·지역경제 분야로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상진 교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진석 특임교수,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실용훈 교수,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기현 명예교수,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조순현 교수, 지역경제교류회 홍순경 회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국정제 시행, 전북지역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인구감소 지역과 이민정책, 지속 가능발전 조례 시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원, 기획행정위원회 관련 조례 입법성과 점검 자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조직재설계 필요성과 방향, 이주민 한국어 기초 교육 지원으로 지역 산업체 기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이만호 기자

##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

### 의정발전 자문위원 위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의정발전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의정발전 자문위원들은 농업·환경·보건·복지·산림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야의 주요 쟁점 논의 및 건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승식 위원장은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과 도민이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제안 주신다면 상임위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예정된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

한편,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의정발전 자문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대자인병원 이병관 원장, (전)산림청 김상민 정책자문위원, JM 테크 주재민 대표, 원광대학교 최인숙 교수, 군산대학교 강동희 명예교수, 유원농조합 류근백 대표 등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각계 전문가 6명이 위촉됐다. /이만호 기자

## 식생활관 환경 조성·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 장연국 전북자치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으로 학교 식생활관의 환경을 급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에 착안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출발점이자 학교 운영의 필수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는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발맞춰 조례안은 식생활관 환경개선과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발의되었고,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14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식생활관 개선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더불어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급식종사자의 배치기준과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의무화 등도 규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4일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만호 기자

식생활관 환경을 개선할 경우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조례안은 △식생활관 환경 개선,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식생활관개선협의회 구성·운영, △급식종사자의 배치 기준,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연국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폐암 확진 또는, 폐암 의심 소견을 보인 사례가 잇따라 발생되고, 이로 인해 학교 식생활관이 축적되는 알타로 인식되는 등 사회적